

남북물류망 연계, '반도의 한계' 넘어 대륙경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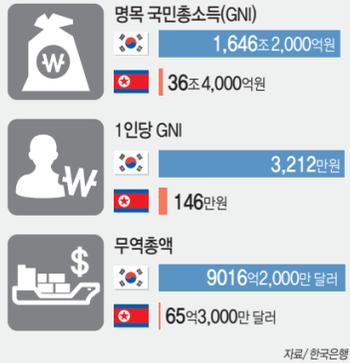
한반도 봄바람

〈上〉 정상회담과 韓경제

코레일, 남북대륙사업처 신설
통일 위해 경제적 격차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두 정상 이 이번 회담에서 향후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면서 미 보호 무역주의 등 제동이 걸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한국 증시가 최고 8% 상승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16년 기준 남북 주요 경제지표



철도와 도로를 연결, 현대화해 실질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관광 교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철도·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경제성이 배가된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남북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기대된다. 북한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탓에 당장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실질적인 통일 이후를 살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 남북한 간 국민총소득(GNI)은 우리가 북한의 45배, 무역총액은 138배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1646조2000억원. 반면 북한은 우리의 45분의 1 수준인 36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만 해도 GNI는 12배 차이에 그쳤으나 2001년 33.9배, 2015년 45.5배로 확대됐다. 1인당 GNI를 살펴보면 남한은 지난 2001년 1443만원에서 2016년 3212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북한은 89만원에서 146만원으로 늘어났을 뿐으로 그 격차는 16.3배에서 22배로 더욱 커졌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핵개발로 최근까지 각종 국제사회 제재에 묶여 있던 북한은 우리와 무역격차도 상당하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총액은 남한이 9016억2000만 달러, 북한이 65억3000만 달러



로 138.1배나 차이난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지속될

경우 향후 자유왕래가 허용됐을 때 북한에서 일시 700만명 가량이 남하(南下)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가 있다"며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내려온다는 말인데 이는 양쪽 모두에 재앙으로, 통일 전 남북 간 소득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는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성공적 남북 경협 위한 '디딤돌 경제'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경제적 차이를 완화하고 교류 강화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완충지대, 즉 '디딤돌 경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사례를 살핀 결과 남한의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창용 KDI 국제정

책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경기도가 집중하는 산업을 북한의 특정 지자체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분단 국가였던 독일 역시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간 지자체 교류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북한연구소가 발간한 '독일 통일 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르면 과거 동·서독의 대표적 항구 도시인 뉘른베르크와 비스마르크 등은 통일 전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 단위의 교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을 이룸으로써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코레일은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전담할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했다. 남북 정상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기로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올 상반기 내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장 포화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동남아로 눈을 돌리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남북 경협이 추진돼 물류망이 연결되면 우리 경제 영토가 대륙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新남북경협, 경제성장의 기회로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내·외부인사 경쟁구도... 靑 의중이 변수

》 1면 '포스코 차기 회장 3파전'서 계속

결국 승자는 제철소 운영노하우를 갖춘 정 회장이었다.

권오준 회장 역시 엔지니어 출신이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역대 회장은 황경로 전 회장(1992~1993년)이 유일하다.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회장을 맡은 정명식·유상부·이구택·정준양 회장 모두 엔지니어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은 박태준 명예회장이 엑스모빌에서 직접 영입했던 인사로 박태준계 인사들 사이에서 차기 포스코 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 개발과 에너지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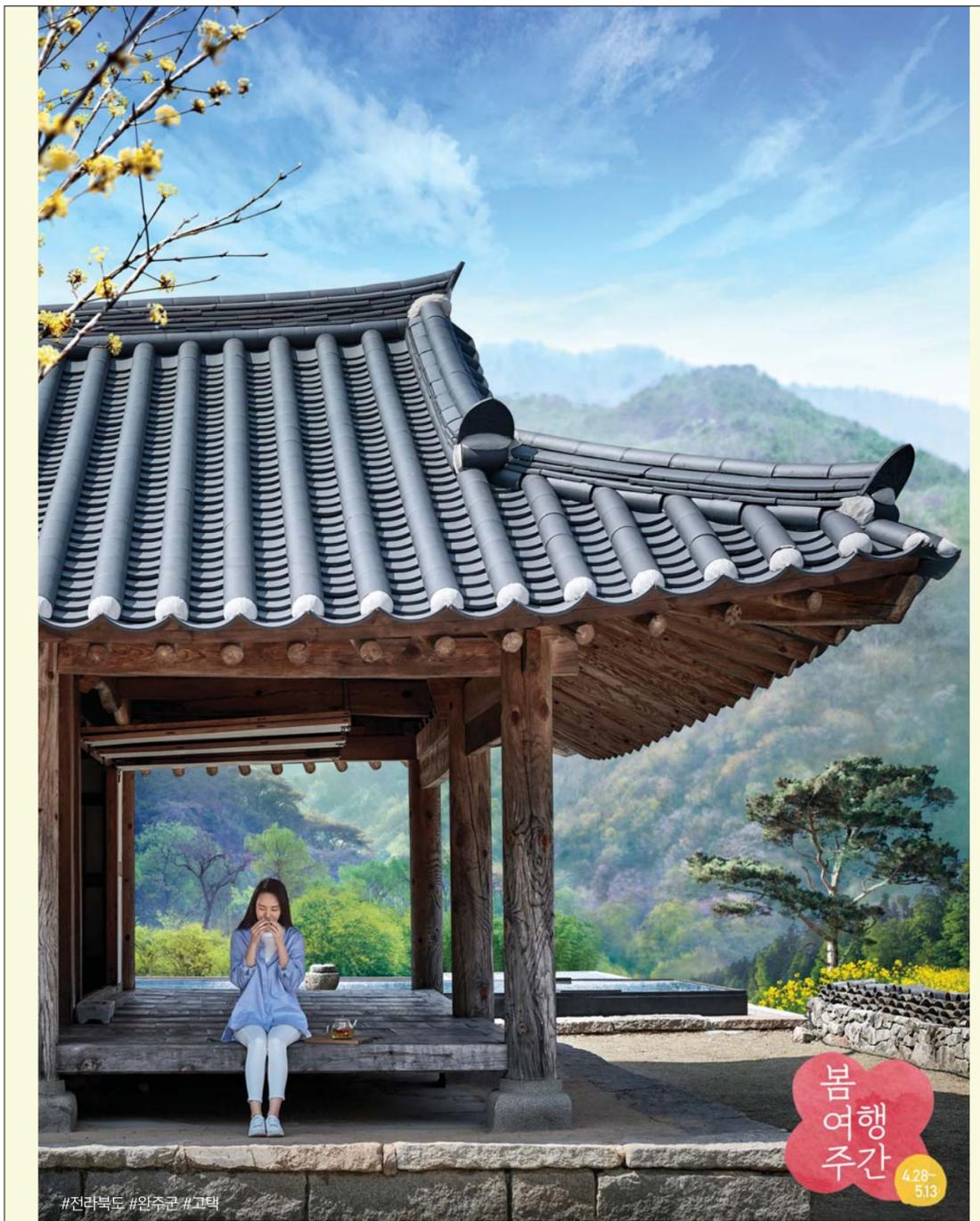
김준식 전 사장은 장하성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준식 전 사장은 광주제일고 출신으로 장하성 실장과는 초

등학교·중학교 동기동창이면서 권 회장에 밀려 포스코를 떠났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다. 또 이낙연 총리와 광주제일고 동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이구택 전 회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포스코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한 인물이다. 때문에 이구택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장하성 실장의 강력 추천이 있을 수 있어 차기회장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 현재 정치권에서 포스코에서 은퇴한 몇몇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포스코 차기 회장을 겨냥해 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수의 증가는 중국의 철강 가동률 제한 정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량을 늘리면 곧바로 추격당할 위험이 크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회장을 제대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다양한 여행할인 혜택과 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보세요

travelweek.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